

환경청,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本協會 홍보부
부장 조일성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환경청 支廳설치는 사실상 환경청의 部승격이나 다름없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 인식에 대한 국민의 식수준의 질적 향상 등을 고려해보면 이번의 조치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더우기 수 년 전부터 환경분야의 일각에서 廳의 部승격이 절실하다는 요구를 수없이 해왔던터인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된 조치인 지청설립은 환경보전의 새로운 장을 열과 동시에 환경행정 업무의 개선 및 간소화가 이루어질 조짐이어서 더욱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환경청 本廳에 廢棄物管理局를 신설하고 그 밑에 폐기물제도와,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과를 두어 급증하는 폐기물처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은 더더욱 환영할 만하다.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환경문제 해결 의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행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시켰으며 시도와의 업무협조 활성화로 광역 환경행정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번 조치의 배경

그러면 이와같은 조치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국민 및 업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 이해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대개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의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실천의지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홍보 및 규제업무도 미흡했던 탓에 문제의 심각성을 누적 또는 은폐시켰던 것이다. 배출업체들은 거의 모두가 公害問題 해결에 대한 투자를 외부불경제로 도외시켰으며 개인 및 가정에서도 환경

“

환경청 支廳설치는 사실상 廳의 部승격이나
다름없는 조치라 볼 수 있겠다.

”



오염 행위가 기업쪽이나 해당되는 것처럼 인식하였다. 실제로 家計에 의한 오염행위를 수치적으로 볼 때 폐기물의 70%, 廢下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심각성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두번째로 이전까지의 행정자체가 폐기물 문제에 대해 미흡한 대처를 했다는 것이다. 매년 생활폐기물이 6%씩 증가하고 있고, 중금속등 특정 有害物質을 함유한 폐기물의 발생증가도 36%에 달했으며 1인당 쓰레기 排出物量도 1.95 kg/日에 달하여 日本의 0.8kg/日보다 두배

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인 埋立地부족(매립율 92.5%, 지금의 확보공공매립지의 사용가능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지방재정의 한계와 주민 반발로 인한 추가매립지의 확보곤란, 폐기물재활용시책미흡(폐기물중 15~70%가 外資를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시 외화절약에 기여할 수 있다. 또 空瓶회수율 10%제고시 450억원의 막대한 활용이 가능하다) 등으로 폐기물 문제를 전담할 局의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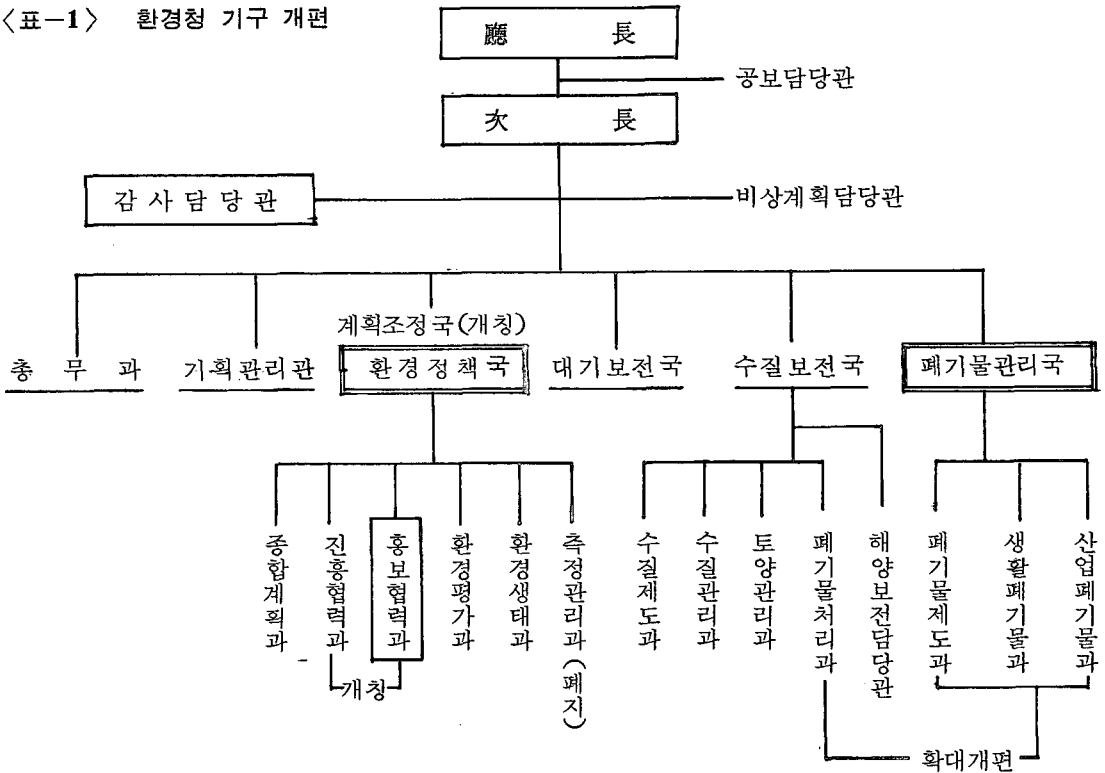
“
 지금까지의 환경문제는 국민과
 업계의 실질적 이해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

세제로 지방행정사무소 및 점검반 분리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인력, 예산, 장비 등의 효과적 활용으로 광역권 개념에 의한 업무추진의 실효성 확보는 支廳설립의 모토가 된다고 하겠다.

늘어나는 폐기물문제에 대처키 위해 本廳에 폐기물관리국을 신설

〈표-1〉에서 보듯이 종전의 수질보전국의 폐기물처리과를 확대, 폐기물관리국으로 하고 그 밑

〈표-1〉 환경청 기구 개편



에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과, 폐기물 제도과 등을 두었다. 각 課의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廢棄物制度課〉

- 폐기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 폐기물 재활용방안 연구 및 지원

○ 폐기물 처리기술 및 방법의 연구개발 지원
 〈生活廢棄物課〉

- 생활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기준설정
- 쓰레기 및 분뇨 종말처리시설 설치 계획의

“

제주도에는

출장소를 두어 환경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

종합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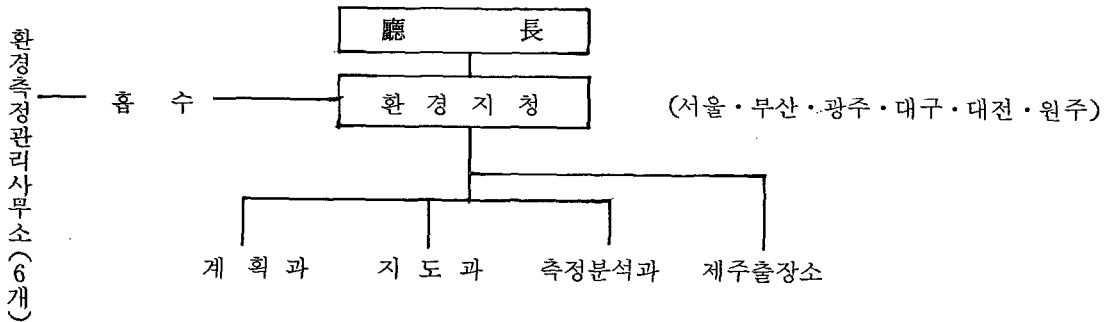
-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정 <産業廢棄物課>
- 산업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산업폐기물 처리방법 기준설정
- 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 산업폐기물 발생 감소대책

이밖에 계획조정국의 명칭을 「환경정책국」으로 바꾸고 진흥협력과를 「홍보협력과」로 개

家計에 의한 오염행위를 수치적으로 볼 때 폐기물의 70%, 폐하수의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보전의 급선무는 가계에 의한 오염행위를 줄여나가는데 있다.

청하는 한편 측정관리과를 폐지시켰다. 또 次長 밑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했다.

<표-2> 환경지청 기구



환경측정관리사무소를 6개支廳과 1개 출장소로 개편

環境支廳은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원주에 6개 지청을 신설하는데 지청 밑에 「계획과」

환경지청의 운영 방안은 지청이 광역권별로 지청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권역내의 지방과 중앙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광역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토록 하기위함에 있다.

「지도과」 「측정분석과」 등의 3개 과를 두었다. <표-2> 참조. 제주도에는 제주 출장소를 두어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여기서 원주에 원주지청을 둔 이유는 종전의 춘천사무소 관할구역중 강원도 춘천시, 춘성군, 홍천군, 화천군, 양주군, 인제군, 철원군 등이 북한강 수계여서 서울支廳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기에 원주에 지청을 둔 것이다.

이같은 환경지청의 운영방안은 지청이 광역권

“

국립환경연구소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 개칭

”

별로 집행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권역내의 중앙과 지방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광역 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며 그에 대한 주기능은 측정과 지도단속을 연계하여 오염도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는데 있다. 중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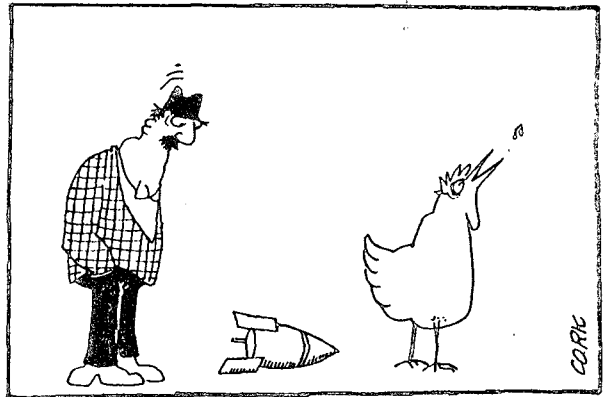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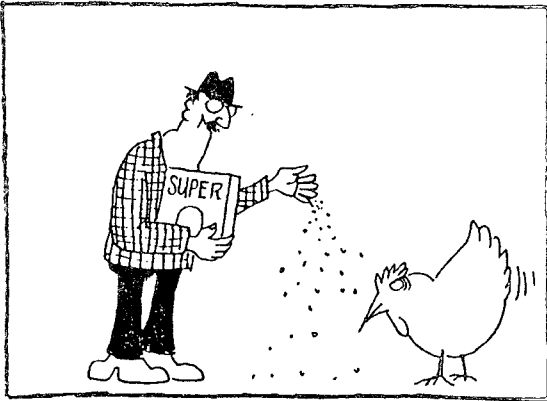
지역에 맞는 환경정책의 수립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던 환경문제 해결의 최선적 방법이기도 하다.

환경행정의 시책방향과 원칙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

으며 더불어 수계별, 대기영향권별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시행과 시책을 관할구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적합한 반영, 지방의 문제점과 건의를 중앙에서의 광범위한 수렴, 지방자치단체·배출업체의 기술지원, 지역에 맞는 홍보·계도 추진, 환경행정의 마무리 기능 등을 유도키 위한 제반 기능에 목적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도 국립환경연구소를 「國立環境研究院」으로 개칭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에 노력토록 했다.

이와같은 청의 활성화 방안은 2000년대를 대비한 정부의 예지로 여겨져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



질서는 나라자랑 친절은 나의자랑